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

지금 필요한 것은 문재인 우향우에 맞선 투쟁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8월 16일 회의를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복귀를 결정했다. 최저임금 삭감법 추진에 항의해 5월 2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참가 중단을 선언한 지 석 달 만이다.

그러나 지난 석 달 동안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참가 중단을 재고할 만한 변화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남아 있었다 해도 박차고 나와야 마땅한 일들만이 잇달아 일어난 석 달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삭감법 등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지방선거 이후 우향우에 속도를 더하면서 친기업적 정책에 열성을 보였다. “혁신 성장”의 이름으로 대기업들이 요구해 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 민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버리고 있다. 박근혜가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치 세우고] 기조 속에 추진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이다.

문재인은 7월 3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지방 선거 이후 진행하려는 개혁에 속도를 조금 더 내겠다”고 했는데, “개혁”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이었던 것이다! 당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 면담에 대해 민주노총 간부층 내에서도 불만이 속출했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반면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공세가 이어졌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이른바 한국형 안정유연모델은 “실업급여 등을 확충해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면서 노동시장 유연성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한겨레〉). 최근 정부가 예고한 국민연금 개악도 노동계급 사람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지난 정권까지 강압적으로 추진하다 이미 파탄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 폐기를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4월 24일 민주노총 논평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합의에 부쳐’).

그러나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을 보든 노동시장 유연성 카드를 꺼내든 것을 보든,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이 주장한 “전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이 명백하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참가 중단을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는 국면”이라고 했다. 그런 국면은 지속되면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도 “노동존중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복귀 명분이 별로 없음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신뢰회복 조치를 위한 노정교섭 병행 추진”을 결정한 듯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너진 신뢰가 노정교섭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 이를 검증하는 데는 24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복귀가 결정된 직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로 노정실무협의(노정 4자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열렸다. 하지만 정부 측은 법외노조 지위를 직권으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이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결국 전교조는 노정 4자회담이 의미 없다고 보고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노정교섭에 대한 기대는 문재인 정부의 우향우가 정부 내 일부 인사들만의 문제라고 오해하는 데서 비롯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노정교섭 병행 추진”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복귀의 ‘보완책’으로서 제시된 것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반대해도 노정교섭은 지지하는 좌파 노조 간부들을 달래고 설득하려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정책대의원대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복귀를 결정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위 후신인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이하 경사노위) 참가 문제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



경제 침체 전망 속에서 정부와 사용자들의 공격을 막고 개혁을 성취할 힘은 오직 대중 투쟁에 있다

의만이 아니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와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등에도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 사실상 경사노위 논의에 참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사노위는 6월 12일 출범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와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는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들로, 각각 7월 12일과 20일 발족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 내 논란을 방지하면서 민주노총 지도부를 이 위원회들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최근 느닷없이 이 의제별 위원회들을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산하 위원회들인 것으로 이름패를 바꿔 달았다.

그러나 이런 꾀수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이나 노사관계제도 등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 의제로 선정된 것이라는 사실까지 뒤집을 수는 없다. 실제로 경사노위 측에 문의해보니,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를 결정하면 각 위원회는 경사노위 산하 기구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올해 1월 25일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참가를 결정했을 때,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새

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과 구성을 위한 논의기구’로 규정됐다. 그러나 이번 복귀 결정을 통해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 의제 선정 등 애초 논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다루기로 한 의제 논의에도 참가하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말이다.

이런 점에서 10월 정책대의원대회의 논의와 결정은 김 빠지는 사후 승인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

의사결정 절차 문제뿐 아니라 민주노총이 이 위원회들에서 어떤 내용으로 대응할지도 문제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국민연금 개악을 압박하고, 사회안전망 마련을 노동시장 유연화의 추진력으로 이용하려는 등 민주노총에 양보를 강요할 텐데 말이다.

대중 투쟁

문재인 정부의 우향우를 보면 지금은 어느 때보다 그에 맞선 실질적인 투쟁을 해야 할 때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악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정신없이 쏟아내고 있는 데 반해 노동운동은 신속하

고 단호하게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참가 중단 이후 6월 30일 7~8만 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개최했지만, 이내 사회적 대화 복귀 쪽을 기웃거렸다. 산별노조·연맹 지도자들과 일부 노동단체 지도자들도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와의 신뢰 회복을 바라고 대화에 대한 기대를 부추기는 동안 정부에 맞선 노동자 대중 투쟁이 전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의 “투쟁과 교섭 병행”은 가능하지 않다. 노동자들을 무장해제 시키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지금 부족한 것은 사회적 대화나 교섭이 아니다. 어차피 사회적 대화나 교섭에서도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거나 기껏해야 형편없는 안을 들이밀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저지할 힘을 실제로 발휘하는 것이다. 그 힘은 경제 침체 전망 속에서는 오직 대중 투쟁을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다.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 팀장,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여당과 보수 야당들,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합의

안전·공공성보다 이윤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

장호중

8월 16일 문재인이 규제 '혁신'(완화)법 처리를 요청하자 이튿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등을 8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두 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된 대표적인 민영화·규제완화 법안인데 이를 고스란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규제혁신5법'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계승·확대·발전시키는 모양새다.

서비스법은 '상위법'으로 다른 법률들에 담긴 규제 조항들을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제 완화' 조치를 담고 있다. 예컨대 의료법에서는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허용할 수 있다. 투자 개방형 학교를 설립하거나 철도를 민영화하는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도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쉽게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가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모든 법령의 제·개정に関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들의 저항이나 특정 부문 자본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해당 부처 관료들이 개악한 처리에 미온적일 때 이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 영리화 반대운동 등의 효과로 서비스법의 본질이 널리 알려졌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규제프리존법·서비스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규제 완화·영리화 법이다

이에 압력을 받아 엉겨주춤한 입장을 취하자 법안 통과도 지연됐다. 다만 그때에도 민주당과 문재인은 법안 취지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

지금도 민주당은 의료를 제외하자며 공방을 벌이는 시늉을 하지만 진정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문재인은 의료기기 규제 완화와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를 위한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

포괄적 규제 완화

규제프리존법은 서비스법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박근혜 정부가 들고나온 법안이었다. 서비스법을 대신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없애려는 규제와 관련 법률들을 일일이 나

열하고 이를 지역 '발전'으로 포장했다.

선거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시도였다. 실제로 당시 충남도지사 안희정, 전남도지사 이낙연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규제프리존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규제프리존법은 67개나 되는 법률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 또, 기업주들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공공서비스를 영리화하고, 안전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자산을 기업주들이 쉽게 구입·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들로 가득하다.(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기사에 첨부된 표를 참고하십시오.)

규제프리존법은 국내의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은 일단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성을 평가해 보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규제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는 기업주와 정부 관료들이 보기에 "불합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들이 제멋대로 특례를 신청·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다.

각종 대학 연구 보고서가 조작됐던 가슴기 살균제 사건, 기업의 자체 안전성 평가 외에 믿을 만한 정부의 평가 자료조차 없고 그조차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없었던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BMW 화재 사건 등이 떠오른다. 이 사건들은 하나같이 정부 자신의 안전성 검증 없이 기업 측의 평가만 믿고

사용을 허가한 경우다.

그러다 사고가 나자 정작 정부는 뭐가 문제였는지도 알지 못했고, 이런 방식을 인정해둔 터라 기업 측의 내부 연구 자료를 요구해도 기업주들이 이를 손쉽게 거부할 수 있었다.

또, '신기술'의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효용성만 증명하면 일단 사업을 승인한다. 심지어 신기술에 대한 규정도 모호해 기존 기술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판돼,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임상시험 대상이 되는 셈이다.

규제프리존 선정을 담당하는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에는 기재부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 인사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이 실제 규제프리존 운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데 기업들이 이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직접 참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5법은 규제프리존법을 5개 법안에 나눠 담고 일부 영역은 더 확장한 것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조치도 그대로다. 민주당은 이 법을 규제프리존법과 병합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 부문을 제외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는 부정확한 것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들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그것도 불과 열흘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산하 노동조합들, 규제 완화와 민영화 등에 반대해온 노동·사회단체들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저항에 즉시 나서야 한다.

이화여대 비정규직 휴게실·작업공간의 끔찍한 실태

“우리를 사람으로 보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양효영

최근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휴게실 실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올해 3월 이화컴퍼스복합단지(ECC)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이 매연 가득한 지하 주차장 구석에 박혀 있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폭로됐고, 노동자들은 이 보도를 활용해 학교 당국을 압박해 쾌적한 휴게실을 얻어냈다. 이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던 이화여대의 다른 노동자들 사이에서 휴게실·작업 공간 개선 열망이 커졌다.

매연을 하루 종일 마시는 주차 노동자들

ECC 청소 노동자들의 옛 휴게실 바로 옆에 위치한 주차관리소에서 일하는 주차 노동자들의 불만이 특히 높다. 이 노동자들은 지하 주차장에서 일하느라 아침 7시부터 밤까지 하루 종

일 매연을 들이마셔야 한다. 휴게실은 아예 없다.

“공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 두 달씩 앓아요.” 한 여성 주차 노동자의 말이다. 실제로 주차관리소 벽과 문 곳곳에 시꺼먼 매연이 묻혀 있다.

학교 측은 ‘주차관리소가 지하에 있는 것이 접근성이 좋다’며 둘러댔다. 그러나 2010년까지는 주차관리소가 지상에 있었고, 노동자들은 아무 불만이 없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지하 주차장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상의 미세먼지가 최악일 때보다 3~4배 높다. 지하 주차장에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배기가스를 비롯한 온갖 발암 물질이 그득하다.

에어컨 대신 ‘금성’ 선풍기

학관(인문대)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 실태도 기가 막힌다.

학관 꼭대기 6층에 있는 휴게실은 창고 같은 공간에 평상 하나가 다이다. 지붕 바로 아래 위치한 데다가 창문에는 커튼도 없어 문을 여는 순간 숨이 턱 막힐 지경이다. 그런데 에어컨이 없다!

청소 노동자들은 낡아빠진 ‘금성’(LG의 20여 년 전 이름) 선풍기로 몇 년을 버티고 있다. 이곳 청소 노동자들은 올해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옆 건물에 가서 쉬어야 했다.

미술 전공 학생들의 건물인 조형예술대학의 청소 노동자 휴게실은 특히나 습하고 후끈한 곳에 있다.

청소 노동자 4명이 3평 남짓한 컨테이너 박스를 다시 남자 방 여자 방으로 쪼개서 쓰고 있다. 남자 방은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넓이다. 끔찍하게도, 이 휴게실에도 에어컨이 없다.

오래된 데다가 습기와 열기에 취약한 가건물이다 보니, 벽이 허물어지고 악취가 나고 바퀴벌레가 산다.

휴게실은 미술 작업에 필요한 석고와

목재와 쇠를 가는 곳 바로 옆에 있다.

“아무리 방진 마스크를 써도 당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먼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휴게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청은 번번이 묵살당했다.

“바닥재가 다 찢어졌는데도 안 바뀌줘서 학생이 버린 게[장판] 주워다가 깔았어.”

게다가 매점 등 다른 공간 에어컨의 실외기가 휴게실 주변에 설치돼 있어 한층 열기를 더하고 있다.

“[실외기가] 매점에 있으면 시끄럽고 미관상 안 좋다고 우리 쪽으로 뺐거든요. 우리는 사람도 아니니까 여기다 뒀나 봐.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노동자들이 실외기 열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자 학교 측은 리어카로 실외기 앞을 막았다. 그걸로 끝이었다. 정말이지 사람으로 안 보는 듯하다.

소모품 취급

이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다른 건물 휴게실들도 에어컨이 없는 곳이 많고, 난방이나 환기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비좁아서 여럿이서는 쉬기 힘든 지경이다. 그러는 동안 이화여대 당국은 적립금을 수천억 원이나 쌓았다.

최근 학교 당국은 이화여대 동문의 대법관 취임을 두고 ‘여성 교육의 산실’, ‘여성 파워’ 운운하며 학교 정문에 현수막까지 걸었다. 그러나 정작 그 이화여대의 여성 노동자들은 고통스러운 노동 환경에 내몰려 있다.

열악한 휴게실 문제는 이화여대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지부 이화여대분회는 앞으로 휴게실과 작업 공간의 열악한 실태를 널리 알리고 싸워 나갈 계획이다.

이화여대 당국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휴게실을 즉각 보장하라.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가

김인식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노동자 연대〉225호 기사에서 김문성 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불충분하고 그나마 후퇴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혁을 공격해 도로 빼앗아가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방식(자회사 고용 등) 고수, 근로기준법 개악해 장시간 노동 관행 합법화, 양승태의 사법거래에 침묵,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철회 거부, 국민연금 개악 기회 노리기, 학생들에게 여전히 입시 부담을 지을 대입제도 개편안, 간판만 바꾼 기무사 개혁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북 사업가 구속, 미적거리라는 물가 방지 대책 등.

문재인 정부가 (평범한 대중의 염원인) 개혁보다는 (지배자들의) “통합”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실례들이 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명언이 실감난다. 민주자유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소속 대통령 김영삼(1993~1997년 재임)이 맨 처음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원작자는 아니다. 자본주의 역사만큼 오래된 말이다.

김영삼은 ‘개혁가’를 자처했지만, 일부 인적 청산(군부 내 엘리트 사조적인 ‘하나회’ 해산 같은)만을 했다.

더 중요한 개혁인 법·제도 개혁은 구질서 수혜자들의 적대에 부딪혀 거의 하지 못했다. 개혁의 대상이 되는 측(수구 세력)은 이해관계 때문에, 살기를 드러내며 강하게 저항했다.(김영삼이 한 거의 유일한 ‘제도 개혁’인 금융실명제는 노동계급의 이익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 과정에서 뿌리 깊게 형성돼 온 관행의 개선(비제도적인 부분으로, 가장 어려운 종류의 개혁)은 손도 못 댔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교체로 등장했는데도 인적 청산마저 미흡하다. 대표적으로, 김동연 같은 시장 지향적 관료가 경제 수장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같은 일부 제도들은 박근혜 정부 이전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달리 말해, 이명박 정부 시절로 돌아갔다.

난장판인 자본주의

개혁을 제공하겠다는 정부가 그 약속을 배신한 경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당시 민주당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혁(민영화, 한미FTA, 규제 완화, 비정규직 양산, 노동자 대량 해고 등)을 추진하고, 제국주의적 전쟁(조지 부시 2세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해 한국군을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 파병했다.

왜 대중에게 개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집권한 정부가 개혁을 배신하



화기애애 서민들의 폭염 속 전기료 고민도, 전교조 위원장 단식 등 노동자들의 절규도 외면한 문재인은 재벌들과는 잘 지낸다

는 일이 반복되는가?

개혁은 기존 질서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자는 것이다.(반면, 혁명은 기존 질서를 분쇄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개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임을 자처한다. 혁명을 통한 세계 변혁은 공상일 뿐이라고 조롱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민주적으로 개혁해 가면 평등과 민주주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개혁주의자들의 전략은 20세기 내내 실현되지 못했다. 전형적으로, 서구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이 전략을 추진했다. 하지만 집권하면 오히려 어김없이 노동계급을 공격했다.(문재인 정부는 사회민주주의 개혁 정부도 되지 못하는, 자본가 계급의 개혁주의 정부이다.)

가장 최근 사례는 그리스 시리자다. 시리자는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으로,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적 전쟁을 지지한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다를 것이라는 광범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시리자는 집권(2015년 초) 반 년 만에 여느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을 공격하면서 흔한 개혁주의 정당으로 전락했다.

이런 사례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개혁해서 노동계급 등 차별받는 사람들

에게 이득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기는 커녕, 반대로 그런 전략을 추진한 개혁주의 정당이 체제의 포로가 될 뿐임을 재확인시켰다.

자본주의는 무계획적이고 난장판이다. 이윤 추구는 비합리적이며 모순된 결과를 낳는다. 2011년 후쿠시마 핵재앙은 핵발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온 일본 정부와 이윤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 설비조차 마련하지 않은 도쿄전력이 만든 인재였다. 2009년 쌍용차가 2650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던 날 쌍용차 주가는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쳤다.

또, 자본주의는 극단적으로 지독하고 잔인한 체제이다. 자본주의는 저절로 붕괴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체제가 위협당할 때는 무솔리니(이탈리아 파시스트), 히틀러(독일 나치), 피노체트(칠레 군부 독재자) 같은 독재자들을 내세워 체제를 수호했다.

지배계급은 결코 권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반대로,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리면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 심지어 핵 전쟁의 위협도 불사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말했다.

따라서 자본주의라는 대지 위에 ‘합리적인’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스스로 권력을 쥔 러시아 노동자들은 혁명에서 승리했다

무역전쟁

당면해서는, 엄습해 오는 경제 위기의 심화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빠른 속도로 개혁을 배신하고 우경화하고 있다.

2008년 경제 공황은 1929년 월스트리트 붕괴만큼 재앙적이지는 않았지만(1931년 독일과 미국에서는 노동자들의 3분의 1이 실업 상태였고, 세계경제 생산량의 3분의 1이 감소했다), 현재의 경제 회복은 1930년대보다 더디다.

그나마 이 더딘 회복도 트럼프가 촉발한 무역전쟁이라는 새로운 장애물에 부딪혔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세계 무역이 70퍼센트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세계 성장의 절반을 파괴할 수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수출 지향적인 한국 경제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급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본가들의 이윤을 지켜 주는 쪽으로 신속하게 가닥을 잡았다. 사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의 일부다.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그룹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해마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보다 더 많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1995~2014년 평균 실질임금이 생산성 증가를 고스란히 따라갔다면 2014년 말에는 평균 실질임금이 13퍼센트 인상됐었을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않고 기존 기구들, 특히 국가기구들을 통해 개혁을 제공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근원적인 문제들에 부딪힌다.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주의적이지 않은 변화일지라도) 변화에 격렬하게 저항한다. 국가는 겹질을 벗겨도 가만히 있는 양파가 아니다. 국가는 호랑이 같은 것이다. 1930년대 영국 노동당

의 정치인 R H 토니는 이렇게 말했다. “양파는 한 껍질씩 벗겨서 먹을 수 있지만, 살아 있는 호랑이의 발톱을 하나씩 뽑을 수는 없다. 그랬다가는 호랑이에게 먼저 잡아먹히고 말 것이다.”

그리고 국가 기관은 대부분 비민주적이다. 판사, 군 장성, 국정원장, 검찰 총장, 고위 공무원, 고위 경찰, 공기업 사장, 교도소장 등 국가 기관(장)들이 대다수 국회의원들보다 노동자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들이 법을 해석하고, 규칙을 만들고,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공무원 노동자나 교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며,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그들은 선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비민주성이 민주주의를 압도한다.

이는 기존 국가가 다른 계급을 지배하기 위해 지배계급이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노동 대중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가 아니다.

물론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노동계급의 일부다. 그러나 결정은 이들이 내리지 않는다. 사병은 자신이 어디에서 싸울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사병이 장교의 명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명령 불복종이다.

그래서 국가 기관들의 가장 비민주적인 특징만을 제거하면 된다면, 국가 기관에 침투해 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심각한 오류다. 국가 기관들은 해체돼야 한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권력 기관들로 대체돼야 한다.

혁명가들은 자본주의 국가를 통해 노동계급에 이롭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개혁주의적인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이런 견해가 옳음을 확인시키고자 한다.

그러자면 사회주의자들은 무엇보다 노동자들도 그들 자신의 투쟁에 의지할 수 있도록 고무해야 한다. 그것이 당면한 개혁을 성취하는 데서도 가장 효과적이다.



거듭되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거부

정부를 압박할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8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 권고안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개혁위는 즉시 직권으로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삭제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해고자·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악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그간 국가인권위, ILO 등의 솔한 권고를 무시해 왔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 스스로 만든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조차 부정하다니 정말이지 기가 막힌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권고는 권고일 뿐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뻔뻔하게 나왔다. 개혁위가 발표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노동부가 권고안 수용 거부 입장을 서둘러 발표한 것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투쟁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듯 보인다.

문재인은 7월 3일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에 대해 “ILO 협약 비준 추진” 입장만 반복했다. 그러나 “법 개정, ILO 협약 비준”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자는 정부의 견해는 법외노조 철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일 뿐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재판 거래 결과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정부는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적폐

승인과 지속을 선택했음을 거듭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노동자들에게 1년만 (투쟁을 자제하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온갖 말잔치와 알팍한 개혁 조처 뒤에서는 구조조정과 최저임금법 개악 등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진행해 왔다.

전교조 지도부는 법외노조를 지속하는 정부에 항의하면서도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이 적은 시기에 직권 취소를 하겠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기대를 걸었던 듯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우파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던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지방선거 압승 이후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우를릭을 하고 있다.

김상곤 교육부의 개혁 후퇴도 한몫을 하고 있다. 교원평가와 성과급, 학교비정규직 차별, 입시 경쟁 교육,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교원정원 감축, 대학 구조조정 등 교육 적폐가 문재인 정부에서 고스란히 지속되고 일부는 더 강화되고 있다.

자라나는 실망과 분노

문재인 정부가 거듭 법외노조 철회를 거부하면서 전교조 조합원들의 실망과 분노가 자라고 있다. 7월 6일 조합원 2000여 명이 연가·조퇴 투쟁을 벌였다. 교사 40여 명은 삭발을 하며 분노와 결의를 표현했다.

이후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벌였고 27일 만에



전교조 기자

문재인과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교육 개혁에 기대를 걸도록 유도했지만, 씁쓸한 배신만 줬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다. 그러나 폭염 속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현장에 청와대 관계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사이 휴가를 다녀온 문재인은 ‘노동 존중’은 안중에 없고,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 추진에 여념이 없다.

전교조 전국일꾼연수에 모인 활동가들의 고민은 법외노조를 철회시키기 위해 하반기에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 하는 것이었다. 전교조 본부는 하반

기 연가 투쟁을 중심으로 한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일꾼들 사이에서는 ‘2000~3000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조합원이 연가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 ‘연가 투쟁을 예년 수준으로 살살 해서는 안 된다’, ‘하루가 아니라 2~3일 하든지, 연가가 아니라 파업에 준하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이런 주장들처럼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단호한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지

도부의 단식 농성만으로는 법외노조를 철회시키기에 역부족이고 정부를 압박하는 집단적인 힘을 보여 줘야 한다.

촛불의 염원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전교조의 투쟁에도 유리한 지형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전교조 내 투사들은 기층 조합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투지를 고무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삭감될 위험

임준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자유한국당)이 8월 10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 처음 입국해 ‘단순노무업무’를 하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무려 2년 동안 ‘수습’ 기간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이 기간 동안에도 더 낮은 최저임금을 줘도 되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 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최저임금이 깎인다.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이민자가 36.4퍼센트(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경우 48.4퍼센트)나 되는데, 이들은 거의 체류 기간 내내 더 낮은 최저임금만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또, 신규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 삭감은 기존 이주노

동자들의 임금 삭감도 부추길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숙박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임금을 삭감해더니, 또다시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이주노동자 취업 삭감 시도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최저임금이 의결되자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1년 차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80퍼센트, 2년 차 90퍼센트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최저임금 삭감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흔히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일을 익히고 안전하게 일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

는다.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저임금에 시달려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낮은 생산성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하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를 추진할 때도 생산성 논리를 앞세운 것이다. 이는 임금 삭감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지, 노동자들이 실제 한 일에 비해 많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 아니었다.

최저임금법에는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사업장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이미 있으나, 시행 첫해 이후 적용된 적은 없다. 만약 생산성 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면 사문화된 이 조항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라는 약한 고리에서 시작해 더 많은 노동자를 향한 공격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업부 장관 홍종학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런 인종차



전교조 기자

정부와 사용자들은 이주노동자를 싸고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노동력으로 써먹고 싶어 한다

별적 요구를 거부하기는커녕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7월 24일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검토를 요청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숙박비 공제 방침 폐지도 외면해 온 것을 보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시도가 진지하게 추진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은 이주

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 것이고, 저임금 노동자 층이 더 늘어나게 할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확대는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압력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해로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차별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